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이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

방첩사령관

국방위 현안질의...군 출동 과정 재구성 1차장 “선관위 서버 복사·유출도 지시” “김용현, 선관위 병력파견 지시” 증언도 박범계 “특수전사령관, 전말 양심고백”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차장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이 국회의원 체포 사실을 밝힌 것은 계엄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사 지시를 받은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 증언하면서 군의 출동 과정이 재구성되고 있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구급시설과 관련된 체포와 지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수방사) B1병커 안에 구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B1 병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병커로, 유사시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이다.

앞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통화에서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조태웅 국가정보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지시에 불응해 대

통령의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유출할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정성우 방첩사령부 1차장(육군 준장(진))은 이날 국방위에서 ‘선관위 서버 유출 지시’ 관련 질문을 받고,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지시했다”며 여 사령관이 지시한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 서버를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관들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법무실에 들어갈 때 7명 전원 서 있었다”며 “계엄법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며 본인들대로 현 상황에 분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버에 대한 카피문제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 과연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곽중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문상호(육군 소장)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교천 정부 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로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국방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곽중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전말을 양심고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 받은 지시 내용이 유혈사태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금 전 곽중근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곽중근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있었다”며 “두번째 통화내용이고 이게 핵심인데, 바로 윤 대통령의 내란을 그대로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탄핵 투표 불참’ 국힘 의원에 근조화환 행렬

지역구 사무실에 배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배현진·이종배·박수영·김희정·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 향의 문구 등이 담긴 근조화환(사진)이 세워졌다.



요 ‘지역을 떠나라’ 등의 비난 문구가 적혀있다.

국민의힘 울산·광주시당 앞에 세워진 화환에도 ‘탄핵 찬성하라’, ‘탄핵 거부 국민의힘 해체’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외에도 지역구 건물에 날계란 등이 투척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08명 의원 중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만 투표해 민심이 들끓고 있다.

시민들은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 편지 등을 전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압박하고 있다. 뉴스시

10일 배 의원 사무실에는 ‘평생의 배신자’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이 의원 사무실에는 ‘내란공범 이종배 민주주의는 죽었다’ 김 의원 사무실에는 ‘엄마 거봐 내가 찍지말라고 했잖아’ ‘국집당에 삼가조를 표합니다’ ‘내란동조 하지마십시오 탄핵표결참석’, 윤 의원 사무실에는 ‘국민의 뜻 짓밟은 윤상현’ ‘정치생명 사방을 선고합니다’ 등의 화환이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대구·경북 당사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거부한 의원들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앞서 지난 9일에도 김재섭(서울 도봉갑)·신동욱(서울 서초을)·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 사무실에 비난 문구를 담은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내란동조 부역자’, ‘내란공범 부역자’, ‘탄핵만이 살 길인데 그걸 견어찼다네

대통령전용기 공군 1호기 이륙 ‘소동’

경호처 “주기적 성능 점검 차원”尹, 사태 이후 관저 칩거 이어가

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전용기인 공군1호기가 이륙하면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 및 항공기 성능점검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며 “오늘 비행도 동일한 사유로 기계화된 임무였으며, 40여분간의 점검 비행을 마치고 현재는 착륙한 상태”라고 밝혔다. 뉴스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에도 관저 칩거를 이어갔다.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관저에 머물면서 정치적 상황과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7일 비상계엄 관련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청사에 잠시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언론 등 외부 접촉을 자제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비상계엄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시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당 20여명 찬성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즉시 시행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보고·12일 표결

국회의원이 자율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요청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도읍, 김상욱, 김용민, 배준영, 김용태, 김형동, 배현진, 우재준,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 권영진, 김기용, 김종양 등 10여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

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소수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2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서울=김선욱 기자